

사지 내몰린 노동자들...불안한 산업현장 매주 1명 사망

■산업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점검 결과



산업안전공단, 2690개 현장 점검...사망사고 위험요인 3468건 적발
 효율·비용절감에 안전 뒷전...올해 4월까지 광주 7명·전남 9명 숨져
 건설현장 위험요인 2131건 중 추락 방지시설 없는 경우 82%로 최다

광주·전남 산업 현장이 불안하다. 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의식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노동자들은 안전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1~4월까지 광주·전남 2690개 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 요인으로 무려 3468건을 적발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광주·전남 모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단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지역 1824개 사업장 중 1024개 현장에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 2131건이 발견됐다. 위험 요인별로는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

추지 않은 경우가 82.12%(1750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공단은 계단과 건물 벽, 지붕, 바닥 등에 트여있는 개구부 등에 방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없이 작업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전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도 이 같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당장, 지난 4월 9일 나주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부 창틀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5월 19일 완도에서도 창틀 실리곤 작업을 마치고 내려가던 노동자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 모두 작업대를 매단 밧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 외에도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 56건 ▲끼임 사고 위험요인 63건 ▲화재·폭발 위험 32건 등의 위험 요인이 드러났다.
 건설업 뿐 아니라 제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 766개를 점검한 결과, 무려 절반이 훨씬 넘는 574개 사업장에서 1337건의 노동자 사고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컨베이어나 프레스, 분쇄·파쇄기 등 현장 설비·기계로 끼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요인이 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추락 위험 342건 ▲부딪힘 90건 ▲화재·폭발 63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계 등에서는 이같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시정 조치가 조속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올 들어 4월까지 광주·전남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벌써 16

명(광주 7명·전남 9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산업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공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가 함께 점검에 나섰다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점검·단속,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이뤄져야 현장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노동당국은 명예 산업재해 감독관 제도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점검기구를 구성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현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포스코 산업현장 2018년 이후 20명 사망...하청업체 노동자가 14명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토론회 "사무실서 만든 안전시스템 문제"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0명이 숨졌다. 분석이 나왔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14명에 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5일 민주노총 광양지부에서 '포스코 중대재해, 환경오염 개선방향과 지역사회·노동조합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포스코 광양 제철소 등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원인조사·사후대책 등을 내놓는 데 따른 문제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포스코의 안전 시스템은 현장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만들어진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진행될 때 노조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포스코의 안전 관련 직원 배치 문제도 지적됐다. 현장의 안전요원을 증원하면서 현장 작업자를 안전요원으로 돌리면서 인원 부족으

로 노동강도는 증가하고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정의당·영암 2)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환경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전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스코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5세 이상 백신 접종 준비 분주 65세이상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들이 관내 백신접종 의료기관에 보낼 최소 잔여형(LDS)주사기를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업주의 안전사고 소극적 대응, 재판부도 지적했다

2인 1조 작업·추락 방지 미흡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2심서는 집유 선고

산업 현장 안전 사고와 관련,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는 법원 판결문에도 드러나있다.
 1심 재판부는 법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점을 이용,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해당 회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허정룡 판사는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여수시 모 호텔 신축 공사 현장소장으로 사다리(높이 2m30cm)를 이용해 3층 높이의 기둥의 평탄 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2인 1조 작업,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공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55)씨가 11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당시 판결을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엄벌,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8~2019년 매해 2000여명에 이르고 법원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된 점도 언급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재판부는 이같은 점에 더해 "A씨 회사의 경우 하도급주려던 회사에 책임을 미루면서 회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점을 이용,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주의 경우 사고 위험과 형사책임을 하도급업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A씨만 항소했고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최근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 뺨소니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공무원이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6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도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

인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